

# 동구권제국의 부채문제에 대한 고찰

고 정 식

(동력자원부 에너지정책과 화공기좌/  
공학박사·응용경제학석사)

## 1. 머리말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東歐圈제국과의 경제교류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경제인들이 동구권과의 합작투자를 모색하고 있어 이미 몇건의 가시화된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北韓은 우리와 정식국교를 수립한 동맹국 헝가리에 대해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시켰다. 신문지상에는 우리와의 교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동구권제국의 침체된 경제사정이 피상적으로 소개되기도 하나 핵심을 이루는 문제중의 하나인 부채문제가 밀도있게 다루어진 적이 없어 필자는 이번 기회에 동구권제국의 부채문제에 대하여 그 역사적 배경과 현황 및 경제학적 고찰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계획경제체제의 발전단계와 특성

### (1) 발전단계

동구 6국(동독,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은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식 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Economies)국가로서 재편되었으며, 이른바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동 지역이 소련세력권내에 편입되면서 종래의 西유럽국가와의 전통적인 관계가 단절되

었으며 대략 다음과 같은 발전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가. 혁명적 단계(heroic-enthusiastic phase) : 혁명에 의해 급속한 국유화, 몰수 및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짐.

나. 관료적 통제경제(bureaucratic-hierarchical command economy) : 모든 생산과 분배가 공산당 관료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짐.

다. 분권적 시장 사회주의(less centralized market socialism) : 개혁단계로서 중앙통제완화와 시장기능의 일부도입이 이루어짐.

라. 성숙된 시장 사회주의(mature market socialism) : 경제활동의 분권화와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자본주의 사회와 많은 유사점을 갖게 됨.

혁명적 단계에 있어서는 축적된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대다수를 점하는 하층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체제 지지세력을 구축할 수 있으나, 이어지는 관료적 통제경제는 경제규모의 증대에 따라 비효율성을 노출하게 되어 목표한대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하여 생활수준의 담보상태내지는 열악해지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국민적 차원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분권적 시장사회주의를 거쳐 성숙된 시장 사회주의의 경제로 이행하게 된다.

### (2) 체제상의 특성

Kornai는 동구계획경제를 “economies of shortage”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만성적 초과수요(chronic excess demand)와 강제적 조정(forced adjustment)으로 특징 지워진다. 결핍은 계획경제에 있어서의 지속적 불균형의 기본적인 형태이며, 투자, 노동력, 수입재화, 외화, 생필품등 거의 모든 주요자원과 재화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들 재화의 부족현상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획경제하의 정책결정자들은 결핍현상(재화와 용역의 부족)을 재분배할 수 있다. 즉, 기계류의 부족은 수입에 의하여 완회될 수 있으나, 그 대신 외화의 만성적 부족현상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계획경제하에서는 하나의 결핍현상은 또 다른 결핍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결핍을 제조정할 때 그 효과는 증폭되어 전체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핍현상은 과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견 상호모순되는 것 같지만, 총수요와 총공급 차원에서는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은 소비자들이 원치않는 재화와 용역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게되며, 이는 이들 동유럽계획경제국가에서는 생산물의 배분이 판매 보다는 할당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에 기인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극단적인 물자매점은 주로 공급자들의 부적절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물품인도

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모스크바시민들이 상점앞에 기나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은 이를 극적으로 나타내준다 하겠다.

### 3. 부채위기의 역사적 배경

東歐國의 부채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구권제국의 경제내 요인과 1970년대의 외부여건변화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 (1) 내적요인

1970년대 이전에는 동구권제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소요를 국내저축과 블록(block)내의 싸무 credit으로 조달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서방의 기술과 자본재투자 수요가 증대하여 서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하였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72간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제국의 서방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5억불에 불과하였으나, '70년대 중반이후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kalecki는 아래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성장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본고에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재고누적(inventory accumulation)항을 제외하였다.

(表 - 1) 동구권제국의 국제금융시장 차입실적

(단위 : 백만달러)

	1968~1972	1973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1~6월)
불 가 리 아	—	115	125	—	—	—	—	—	475	n. a.
체코슬로바키아	—	—	60	475	30	—	50	—	121	”
東 獨	10	15	280	397	516	69	386	903	1,173	”
헝 가 리	140	90	250	550	591	483	567	1,146	1,578	821
폴 란 드	—	430	475	736	—	—	—	235	—	n. a.
루 마 니 아	—	—	6	458	337	—	—	—	150	”
東歐 6개국 計	150	650	1,196	2,616	1,464	552	1,003	2,284	3,497	n. a.
소 련	—	—	650	50	25	153	68	867	1,489	1,248
CMEA banks	—	50	480	—	100	—	—	140	250	n. a.
計	150	700	2,326	2,666	1,600	704	1,071	3,291	5,236	2,219

<자료> ILIANA ZLOCH-CHRISTY, “Debt Problems of Eastern Europe” P, 39. Cambridge University Press(1987)

$$r = \frac{1}{m} \frac{1}{Y} - a + u$$

I : (productive investment) 생산투자

Y : (national income) 국민소득

m : (capital-output ratio) 자본생산비

a : (paramefer of depreciation) 감가상각계수

u : (technological progress factor) 기술진보 계수

r : (growth rate of national income) 경제성장률

東유럽국가들은 南美國들과 유사하게 수입대체와 국내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의 내부지향적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이 점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대외지향적 개발정책을 추진하여온 아시아의 NICS(신흥 공업국)들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위의 모델에서 첫번째 항  $\frac{1}{m} \frac{1}{Y}$ 는 자본증가에 대한 산출증가의 탄성치를 의미한다. 경제가 고도화하게 되면 첫번째 항인 자본 탄성치는 감소하게 되며, 기술혁신(u)에 의하여 경제성장이 주도되게 된다.

후진경제사회가 외부 자본투입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성장초기에 있어서 자본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경우도 성장을 위해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가상각계수(a)를 상회하는 자본 효과( $\frac{1}{m} \frac{1}{Y}$ )와 기술혁신효과(u)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비효율성이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감가상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 신기술 및 생산설비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
- (2) 관료조직내의 전반적인 기술혁신에 대한 무관심
- (3) 노후기계류 폐기지연 및 부품, 공구, 계측기기 등의 부족
- (4)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직성 및 경쟁 부재
- (5) 원자재 수급체계 불비(예, 적합한 규격제품의 적기공급)로 인한 병목효과(Bottle Neck Effect)

또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투자(I)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중앙계획경제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계획 수립시 생산투자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결과 투자소요를 조달하기 위해 수출목표를 높게 책정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Saleability Illusion'이라 일컬어 진다.

수출기관의 의사 결정자들은 수출에 따른 금전적 손

익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budget constraint가 실제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나, 개발기관의 입장에서 수출에 따른 결손이 국가의 조세감면, 보조금 등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기 때문에 budget constraint가 실제적인 제약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동구권 계획경제국가들은 투자효율과 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제수지를 맞추어 나가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요된 채무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채무증가의 악순환은 정책당국의 정책오류에 의해서 가속화되는데 총 수요관리에 있어서는 과소비를 자극하게 되고 불합리한 가격체제는 비교역제의 공급과 교역제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 (2) 외적 요인과 거시경제적 조정

1970년대 이전까지 동구계획경제국가들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 폴란드, 루마니아, 동독, 헝가리의 국제수지는 CMEA제국이 세계경제여건 변화에 취약함을 드러내 보였다.

〈표-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70년대까지 동구권제국의 서방공업국들과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80년대초까지 지속되었으나, 1982년부터는 원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과 세계경기의 활성화 및 수입감소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국별로 보면 체코가 유일하게 1980~5년 전 기간중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불가리아는 1984년까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1985년에 와서는 식량, 원자재 및 중등으로부터의 원유수입으로 3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는 1980년에 적자를 보였고, 1981~5년간에는 흑자를 시현하였다.

헝가리는 유일하게 1980~3년간 계속 적자를 시현하였고, 1984~5년의 수치개선은 미미한 것이었다. 소련은 1980~5년간 1981년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보였으나, 1985년에 와서는 원유가의 하락과 地金수입의 감소로 흑자폭이 대폭 감축되었다. 또한 〈표-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서방공업국들은 이들 지역으로부터 수억~수십억달러의 투자이익을 거두어 가고 있다.

〈表 - 2〉 동구권 제국의 對西方工業國 무역수지(1961 - 1979)

(단위: 백만달러)

	1961~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불 가 리 아	-563	- 20	- 5	- 21	-409	-700	-470	-386	-415	- 43
체코슬로바키아	-450	- 14	- 9	-221	-349	-396	-740	-707	-804	-803
東 獨	-488	-296	-340	-750	-1,028	-1,150	-1,415	-1,326	-1,093	-1,855
형 가 리	-499	-257	-102	- 89	-741	-550	-674	-817	-1,217	-746
폴 란 드	-303	- 53	-313	-1,316	-2,269	-2,746	-3,237	-2,496	-2,052	-1,605
루 마 니 아	-1,379	- 97	-166	-196	-416	-243	- 80	-776	-776	-387
東歐 6개국 計	-3,682	-631	-935	-2,593	-5,212	-5,785	-6,616	-6,208	-6,358	-5,438
소 련	-2,704	-303	-1,288	-1,748	-916	-6,300	-3,974	-1,514	-3,345	-1,131
計	-6,386	-934	-2,223	-4,341	-6,128	-12,085	-10,590	-7,722	-9,703	-6,569

〈자료〉 The Twentieth Century Fund(1983), p. 67.

〈表 - 3〉 동구권제국의 對자본주의 국가 경상수지(1980 - 1985)

(단위: 10억달러)

	무 역 수 지		순서비스+이전소득		경상수지
	計	선진서방공업국	計	투자수익	
불 가 리 아					
1980	1.0	0.1	- 0.1	- 0.4	1.0
1981	0.7	- 0.6	-	- 0.3	0.7
1982	0.7	- 0.5	- 0.1	- 0.2	0.6
1983	0.4	- 0.3	-	- 0.2	0.4
1984	0.6	- 0.6	-	- 0.1	0.5
1985	- 0.3	- 0.6	0.2	- 0.1	- 0.3
체코슬로바키아					
1980	0.1	- 0.4	- 0.4	- 0.3	- 0.4
1981	0.3	- 0.3	- 0.5	- 0.5	- 0.2
1982	0.4	-	- 0.4	- 0.4	-
1983	0.8	0.1	- 0.3	- 0.3	0.5
1984	0.8	0.9	- 0.2	- 0.2	0.6
1985	0.6	- 0.04	- 0.06	- 0.1	0.5
東 獨					
1980	- 1.7	- 1.7	- 0.1	- 1.2	- 1.8
1981	-	- 0.5	- 0.4	- 1.6	- 0.4
1982	1.5	0.7	-	- 1.3	1.5
1983	1.4	1.0	0.3	- 1.0	1.7
1984	1.1	0.7	0.3	- 0.8	1.1
1985	0.9	0.7	0.1	- 0.6	1.0
형 가 리					
1980	- 0.7	- 0.6	- 0.6	- 0.4	- 1.3
1981	- 0.8	- 1.0	- 1.2	- 1.1	- 1.9

	무역수지		순서비스+이전소득		경상수지
	합	선진서방공업국	합	투자수익	
1982	- 0.3	- 0.6	- 0.8	- 1.0	- 1.2
1983	- 0.1	-	- 0.6	- 0.7	- 0.6
1984	0.6	0.2	0.2	- 0.8	0.3
1985	0.2	- 0.14	- 0.49	- 0.56	0.03
폴란드					
1980	- 1.0	- 0.7	- 1.8	- 2.3	- 2.8
1981	-	- 0.5	- 2.1	- 2.9	- 2.1
1982	1.5	0.6	- 2.7	- 3.0	- 1.2
1983	1.4	0.9	- 2.3	- 2.7	- 0.9
1984	1.5	0.7	0.1	- 2.7	- 0.8
1985	1.0	0.6	- 1.8	- 2.5	- 0.7
루마니아					
1980	- 1.9	-	- 0.9	- 0.8	- 2.8
1981	0.2	0.5	- 1.0	- 1.0	- 0.8
1982	1.4	1.4	- 0.9	- 1.0	0.5
1983	1.6	2.3	- 0.8	- 0.7	0.8
1984	2.2	3.6	- 0.7	- 0.6	1.5
1985	2.0	2.55	- 0.54	- 0.54	1.5
東歐 6개국 計					
1980	- 4.2	- 3.2	- 3.9	- 5.4	- 8.1
1981	0.4	- 2.4	- 5.3	- 7.4	- 4.8
1982	5.2	1.7	- 4.9	- 6.8	0.3
1983	5.5	3.9	- 3.6	- 5.5	1.9
1984	6.8	5.5	1.1	- 5.1	3.2
1985	4.4	3.0	- 2.6	- 4.2	2.0
소련					
1980	3.4	2.4	0.2	- 1.2	3.6
1981	- 0.7	- 0.7	- 0.1	- 1.4	- 0.8
1982	4.3	0.6	- 0.2	- 1.5	4.1
1983	6.2	2.5	- 0.1	- 1.4	6.1
1984	4.1	7.5	0.3	0.03	4.3
1985	0.7	- 0.6	- 0.1	0.2	0.6
합 계					
1980	- 0.8	- 0.8	- 4.3	- 7.1	- 5.0
1981	- 0.3	- 3.1	- 5.9	- 9.4	- 6.2
1982	9.5	2.3	- 5.5	- 8.8	4.0
1983	11.8	6.5	- 4.0	- 7.2	7.7
1984	10.9	13.0	1.4	- 5.1	7.5
1985	5.1	2.4	- 2.7	- 4.0	2.6

〈자료〉 United Nations, Economic Bulletin for Europe 36:77-7(1984):the data for 1984 are from Vanous and Movit(1985):the data for 1985(except for Hungary and Romania) are from WEFA, CPE Current Analysis, April 1986.

CMEA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악화, 국제이자율 인상, 자국상품에 대한 수요감소등에 의하여 국제수지가 영향을 받게되나, 시장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자동조정기능(Automatic Adjustment)이 없으며 정책당국의 직접조정(Direct Controls)으로 외부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게 된다. CMEA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출부문으로의 재화배분증가 및 수입감소와 국가의 보유의환을 사용하는 것이며, 둘째, 구조적 변

화의 추진 즉, 수출부문의 확대와 다변화, 수출지향적인 생산부문의 현대화, 수입원자재의 국내 대체등이다.

첫번째 대응방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주로 수입축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두번째 대응방식은 이른바 output switching으로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난제인 것이다. 1980년대에 CMEA국가들은 수출확대와 수입억제를 통하여 국제수지 결손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경우 수입기계 및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투자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의 축소조정이 이

〈表 - 4〉 동구권제국의 고정자본 순투자액

(단위 : 연평균 실질성장률, %)

	1971-1975	1976-1980	1981	1982	1983	1984
불 가 리 아	-	-	12.3	0.4	- 0.2	-
체코슬로바키아	9.5	0.3	-11.1	-11.4	- 1.5	-
東 獨	3.4	2.2	0.6	- 9.0	1.9	-
헝 가 리	n. a.	-	-16.4	-14.6	-22.7	-
폴 란 드	19.6	- 9.2	-24.2	-19.9	4.0	6.0
루 마 니 아	-	8.4	-13.8	- 9.6	- 0.7	-
소 련	-	-	2.5	2.2	5.3	- 1.1

〈자료〉 WEFA, CPE Current Analysis, No. 26-7:11 (1984), No. 63-4:12 (1985), No. 61-2:3 (1985)

들 CMEA국가들의 전형적인 대응방식이다.

투자축소로 정책당국은 단기적인 실업을 방지하는 대신 장기적 성장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CMEA국가들의 정책적 대안이 어떤 거시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GNP = C + I + G + (X - M)$$

GNP : 국민총생산      C : 소 비  
 I : 투 자              G : 정부지출  
 X : 수 출              M : 수 입  
 X-M : 순 수 출

일정수준의 GNP하에서, 순수출의 증가는 Domestic Absorption(C+I+G)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시장경제하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가격 Mechanism과 정부 재정지출 축소 및 수요관리 등에 의하여 달성되나, CMEA 국가들은 그들의 가격, 조세, 이자율 등의 제변수들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가 시장경제하에서의 효과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조정과정 또한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2가지 정책대안이 취해진다.

1. GNP를 일정불변으로 유지하려면, GNP구성은 Domestic Absorption(C+I+G)에서 순수출(X-M)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순수출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입을 축소시킴으로써 GNP를 하향조정한다.

정책대안 1은 GNP의 구성을 줄이더라도 순수출이 증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계획경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취약점인 수출상품 생산능력결여 및 해외시장에서의 수요부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책대안 2는 교역조건(Terms of Trade) 악화에 따른 외부불균형(External Disequilibrium)을 조정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함을 의미한다.

즉, 대안 2는 보유의환계약에 맞추어 Domestic Absorption을 감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안 2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에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정책결정자들의 최우선 선택은 투자의 축소이나, 이는 CMEA국별로 내부의 정치사정상 달라지게 된다.



〈表 - 5〉 CMEA debt service and liquidity ratios, 1980 - 1985

	Debt service ratios <sup>1)</sup>						Liquidity ratios <sup>2)</sup>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불 가 리 아	35	33	34	29	16	14	36	29	35	44	23	51
체코슬로바키아	24	19	18	22	25	31	25	23	17	23	17	32
東 獨	58	60	50	40	36	26	28	30	28	44	43	70
헝 가 리	25	40	36	34	50	70	29	19	16	30	35	44
폴 란 드	99	87	80	68	70	109	8	13	24	30	17	32
루 마 니 아	27	38	41	42	15	26	3	4	6	12	8	10
소 련	8	9	8	8	1	14	25	21	26	28	36	35

註 : 1) 중장기채무의 원리금 상환액 / 시장경제국들에 대한 수출액의 백분율

2) 유동자산 / 시장경제국들로부터의 수입액의 비

〈자료〉 ILIANA ZLOCH-CHRISTY, "Debt Problems of Eastern Europe" p. 6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장기적으로 투자축소는 산업기반의 확충을 저해하며 국민복지의 손실과 함께 GNP성장을 둔화시키게 된다. 소비감축은 일반대중이 즉각 그 댓가를 치러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힘든 결정이며, 정부지출 감소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축소 또는 국방비지출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공서비스의 축소 또한 정치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므로 요즈음 소련을 위시한 CMEA 제국들이 준비축소에 열성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라 하겠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외부경제여건 변화에 대하여 중앙계획 경제국가들은 시장경제국가들이 가지는 자동 조정효과(Automatic Self-Correcting Effet)가 없다.

정책당국자들은 직접적으로 국민경제의 제부문을 조정하거나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제부문에 대한 직접 조정은 체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한에 있어서는 해외차입으로 외적 경제여건변화에 대처해 나가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CMEA국가들의 부채는 계획경제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한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는 1980년대 전반의 Debt Service Ratio와 Liquidity Ratio를 보여주고 있다.

#### 4. 맺는말

동구권제국의 개방정책은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여 시장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필연적 결과이다.

CMEA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원하는 것은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추가적인 자본도입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며, 문화적 전통이나 기술수준으로 볼 때,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있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에 뒤떨어지지 않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대적으로 변영하고 있는 아시아권의 신흥공업국과 경제적으로 침체상태에 놓여있는 CMEA 국가들과의 차이는 시장경제체제와 중앙계획경제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들 CMEA 국가들이 현재 헝가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성숙된 시장사회주의 국가로 체제가 개편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EC통합에 따른 후회진출기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안이한 발상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CMEA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성패의 관건은 우리나라가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에 성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CMEA국가들이 서방선진 공업국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자본과 선진기술의 대체공여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하겠다. □